

전망대

영



벌써 10여년 전에 읽은 얘기인데 여기서 재생한다. 무대는 라틴아메리카의 어느 나라로 잡고, 장면은 각료회의 석상이라고 치자.

“장관 여러분, 세계를 둘러보니 지금 고도 성장을 이룬 나라는 서독과 일본인데, 이들은 모두 미국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경험을 지니고 있소. 그러니 우리도 미국과 싸움을 벌여 한번 지고 나면 경제가 빨리 발전할 게 아니요?”

“대통령 각하, 실로 탁견입니다.”

그때 한 사람이 슬며시 의의를 제기했다.

“글쎄 지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이긴다면 어떻게 하지요?”

“아하, 그런 위험이 따르는구려.”

근래에 유행한 ‘최불암 시리즈’에도—아직 ‘최의원 시리즈’는 안나온 듯하다—이와 비슷한 내용이 있다는데, 아무튼 나는 이 만담을 ‘21세기 일본의 좌표’라는 사카야 다이치의 글에서 읽었다.

그는 일본의 성장을 소프트웨어에 의한 하드웨어 견인(catch-up) 효과로 분석하면서, 특히 전후 복구의 설명에 이 개념을 적용하고 있다. 이를테면 2차대전중에 공장·기계·주택·도로·항만 등등의 하드웨어는 철저히 부서졌지만 지식·기술·경영 등속의 소프트웨어는 그대로 남았는데, 패전 이후 이 낮은 수준의 하드웨어로 하여금 높은 수준의 소프트웨어를 따라잡도록 견인한 결과가 신속한 성장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이다.

진다면 다행이나 이길 때는?

이른바 유엔평화유지활동(PKO)의 협력법안을 둘러싸고 일본 의회에서 벌이는 승강이는 주

말해서 미국은 열심히 싸우며 돈을 썼는데, 일본은 싸움을 피해 돈만 벌었으니, 미국이 일본에 그 ‘싸움값’을 내라고 핏대를 올리는 것은 우리가 아니다.

돈 많이 벌었으니 ‘싸움값’을

아무튼 자위대의 파병 신호가 내게는 마침내 ‘올 것이 온다’는 느낌으로 전달되었다. 묵은 상처를 다시 건드리면서 “옛일을 돌아보라”는 식으로 늘어놓는 주변 국가들의 호소는 한낱 신과 조의 타령에 불과할 뿐이다. 그렇다면 일본이 군비를 증강하거나 말거나간에, 해외에 파병하거나 말거나 간에 우리의 중심을 바로잡는 일이 시급하다. 들리는 말로는 한반도 역시 자위대 파병의 가상적 대상지역의 하나라고 한다. 실로 터무니없는 시나리오지만 만약 이 땅에서 전쟁이 터져 그들의 군대가 다시 진주한다면, 과연 누구의 편을 들어 무슨 일을 벌이겠는가? 바로 여기서 나의 당황이 시작된다. 즉 우리가 경계하는 바가 일본의 재무장인가, 아니면 일본 파시즘의 재등장인가에 따라 그 대응 감각이 달라질 수밖에 없으리라는 생각 때문이다.

형식논리로, 순전히 형식논리로만 따질 때 파병 결정이 일본 파시즘의 재등장 신호라면 남한의 반공정책에 크게 해로울 것이 없다. 그렇다면 정부 일각의 우려 표시는 사실상 허세뿐일는지 모른다. 반대로 경계의 대상이 일본의 재무장이라면, 그것은 남한과 북한이 공동으로 대처해야 할 민족의 과제로 등장한다. 다시 한번 어처구니없는 시나리오지만 한반도에서 걸프전쟁 비슷한 사태가 돌발한다면, 과연 남한은 북한을 응징하기 위해 다국적 군대의 편성에 가담해야

자위대의 ‘타위’ 욕망

변국가들을 몹시 심란하게 만든다. 필요 이상으로 비대해진 군대가 국내에서 그 갈등을 해소할 수 없을 때, 전쟁이나 해외 파병으로 출구를 찾는 전례는 역사에 허다하게 널려 있다. 따라서 자위 능력 이상으로 비대해진 일본의 군대가 ‘타위’(他衛)의 시범을 보이려는 행위는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다. 그것은 군의 생리로도 그렇고, 경제의 논리로도 그렇다. 일본의 자위대가 설정한 ‘주적’은 아무래도 소련과 중국 등 사회주의 국가일 터이다. 그런데 그 가상의 적이 현실의 적으로 돌변할 위험이 현저히 줄어든 지금, 재무장의 근거가 크게 약화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살펴보면 유엔의 ‘평화유지작전’ 지원을 빙자한 해외 파병은 하드웨어의 방출을 위해 이를 데 없이 고마운 명분과 실리를 제공하는 셈이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그 필요가 감지된다. 지난 90년부터 서서히 보여준 경기후퇴의 조짐이 과연 본격적인 불황의 예고냐, 조정국면에서의 한통이나는 문제를 놓고 지금 일본 국내외에서 논의가 분분하다. 그중 국제수지 하나만 예로 든다면 지난해 1천1백34억달러에 이른 사상 최대의 무역흑자가 부쩍 더 심각한 걱정거리로—자랑거리가 아니고—대두되었는데, 무엇보다도 거기서 야기되는 통상 마찰과 보복이 무서운 것이다. 전쟁에서 이기는 위험을 두려워하던 어느 나라 각료회의의 근심이 재연된 셈이다. 내수의 둔화와 수입 감소로 자꾸만 쌓이는 흑자의 고민을 해소하는 데는 군비 지출이 그만이다.

그런데 나는 일본의 이런 국내 사정에 못지 않게 미국의 요구를 더 중시한다. 실제로 미국은 자본주의 세계 경제의 유지 비용을 분담하도록 줄곧 일본에 압력을 넣어왔다. 미국의 안보 우산 아래에서 경제 성장에 전념해온 일본이 쌀 시장 개방에 반대하는 파위의 행동으로 미국의 심기를 거스르는 것도 물론 불손하기 짝이 없는 태도였다. 진주만을 폭격한 1941년부터 지난 90년까지 반세기 동안 일본과 미국의 국민총생산 규모는 1:12에서 1:1.8로 크게 줄어든 반면, ‘군사비/국민총생산’ 비율의 양극간 격차는 같은 기간에 1:0.1에서 1:6으로 크게 늘어났다. 쉽게

하는가? 북한의 핵연료 재처리시설에 필요 이상의 과민 반응을 보이는 미국이나, 그 장단에 올라나는 우리 정부의 태도에서 문득 문득 그런 당혹을 느낀다.

남북 교섭을 중단해야 할 만큼 북한 핵의 위협이 심각하다면 일본 자위대의 파병을 걱정할 이유가 없고, 일본의 무장으로 한반도에 위기가 내습한다면 핵문제를 빌미로 남북간의 긴장을 강화해서는 안된다. 반공을 다지기 위해 일본의 파시즘을 다소라도 승인할 때, 민족 전체의 생존이 일본 제국주의 탐욕 앞에 내던져진다. 이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 분명히 다짐하거나와 나는 핵 위협과 자위대의 파병 그 모두를 거절한다. 다만 핵의 위협을 과장하여 남북간에 겨우 트인 물꼬를 다시 막기보다는, 자위대의 파병으로 개시되는 아시아의 질서 재편에서 남북 공동의 이익을 의연히 지켜나기를 바랄 뿐이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

거꾸로가는 우리의 대응태세

〈추신구라〉(忠臣蔵)는 우리나라의 〈홍길동전〉처럼 일본인이 암송하는 애국소설이다. 50년대에 만화를 열심히 읽은 사람이라면 아마도 김종대 그림이 이 변한 만화를 기억하리라. 모험에 걸려 목숨을 잃은 성주의 한을 풀기 위해 쫓겨간 가신들이 천신만고 끝에 원수의 목을 베고 전원이 할복한다는 줄거리인데, 전편에 의리와 충성이 끈끈하게 묻어난다. 국민학교 때 읽은 만화의 몇 장면이 아직도 뇌리의 한 구석에 생생히 박혀 있을 만큼 ‘어린 백성’의 감격을 짜내는 데는 그만인 책이다. 그런데 서두에 거론한 사가 이야는 그 비운의 성주를 섬기던 3백8명의 무사 가운데 복수에 가담한 사람은 불과 46명뿐이라는 사실을 들어 일본인은 충의가 없는 민족이라고 질타한다. 그가 강요하는 충의가 얼마나 이웃을 괴롭혔는지 우리는 잘 안다. 솔직히 나는 해외 파병에 담긴 그 ‘충의’를 핵의 위험보다 훨씬 더 두려워한다.

〈논설위원〉